

김범석, 쿠팡 연석청문회도 불출석… “국민·국회 우롱 행위”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

오는 30~31일, 6개 상임위와 청문회 개인정보 침해부터 노동환경 등 다뤄 김범석 “예정된 일정으로 불출석”

6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오는 30~31일 3300만개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쿠팡 관계자들을 불러내 연석 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또 제출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청문회를 주관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부위원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와 연석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연석 청문회는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며 국민의힘은 “청문회는 침해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될 수 없다”며 청문회보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25일 서울 시내 한 쿠팡 센터에 관계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은 청문회를 먼저 실시하고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 연석 청문회의 질의 대상은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그치지 않는다. 쿠팡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아 온 불공정 거래와 노동환경 실태 등까지 다루는 연석청문회가 될 예정이다.

관심을 끌었던 김범석 의장은 다시 한

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공개한 김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본인은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12월30~31일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에 출석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며 “해당 일정은 확정돼 변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문회 출석이 불가함

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의 동생으로 알려진 김유석 쿠팡Inc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이사도 각각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 큰 일을 내팽개칠 일정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한민국과 국민들,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 과방위 여당 간사는 “김범석 의장은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며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소환과 국민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에 정부가 반발하는 등 쿠팡과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여당 의원들은 해당 과정도 청문회에서 들여다볼 예정이다.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개

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고 관련 기기를 회수했다는 성명을 냈다. 정부는 이같은 발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쿠팡이 해외, 특히 미국에 영문본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스스로 ‘셀프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심은 커져가고 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 주가는 쿠팡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26일(현지시간) 전 거래일보다 6.45% 급등했다.

김범석 의장은 연석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가 공개된 28일 사과문을 게재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병기, 각종 의혹에 국정운영 ‘발목’… 사퇴 결단 내릴까

〈민주당 원내대표〉

보좌진 사적 동원 등 의혹 쏟아져 與, 침묵 속 결단 바라는 분위기 “오는 30일쯤 입장 정리해 밝힐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보좌진을 사적업무에 동원하고 갈등을 빚은 보좌진의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이 터져나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오는 30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한 두개가 아니다. 김 원내대표는 ▲차남의 지역구 내 송실대학교 편입 특혜 및 보좌진·구의원 동원 ▲김 원내대표 아내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안카드 사적 유용 ▲장



남 국정원 취업 개입 ▲박대준 전 쿠팡대표 이사와의 5성급 호텔 오찬 및 보좌진 취업 방해내용 전달 ▲상임 위 이해관계가 있던 대한항공으로부터 최고급 호텔 숙박권 수수 ▲가족의 베트남 방문 시 대한항공 가족의전 특혜 ▲지역구 내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및 의전 ▲장남의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사적동원 ▲차남 예비군 훈련 연기에 보좌진 사적 동원 등 의혹과 논란이 최근 끊이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이 터질 때마다 해명을 내놓았지만, 법 망을 교묘히 비껴가거나 전 보좌진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민주당 지지자들도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는 평이 나온

다. 김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이사와의 오찬에서 3만8000원짜리 파스타만 먹었다고 주장했다. 5성급 최고급 호텔에서 룸을 잡고 식사한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수십만원의 식대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신은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인 5만원 안에 식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 부터 받은 최고급 숙박권 역시 현재 기준으로 2박 기준 최소 140여만원인데, 김 원내대표 스스로 자신이 낸 가격은 30만원대라고 해명해 역시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자신을 험담하며 전 보좌진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했지만, 지금까지 제기돼 온

보좌진 사적 동원과 이해관계 충돌 사안을 해명할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궁지에 몰리니 자기 보좌진 대화방도 마구 공개하던데, 그 보좌진이 없는 걸 조작했다는 것이 아닌 이상 김 원내대표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것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 내부는 대체로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김 원내대표의 결단을 바라는 분위기다.

정청래 당 대표는 지난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였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송구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매칠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서 발표하겠다는 말도 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다.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도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당대표로서 이런 일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당 내 최고령인 박지원 의원은 “보좌진과의 갈등은 항상 정치권이라 좀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은 “저 같은 경우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법과 방향으로 고민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선 김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비해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의원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지명

李 대통령, 보수정당 출신 인사 낙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엔 김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직제 개편안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가운데, 보수정당 출신 인사인 이혜훈 후보자를 예산처 장관에 낙점한 것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를 비롯한 장·차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엔 이혜훈 후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엔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엔 핵물리학자인 이경수 인에이블퓨전 의장을 지명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17·18·20대 국회의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

원을 역임한 3선 의원 출신으로,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이 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이라며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으로 지명된 김성식 전 의원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재선 의원(18·20대 국회) 출신으로 한나라당과 국민의당을 거친 인사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지명된 이경수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8번을 받은 바 있다. 또 한국핵융합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한국형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개발을 이끈 핵융합 물리학자다.

한편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김종구 농림부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엔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내정했으며 대통령 정부특별보좌관엔 6선 의원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책특별보좌관엔 이한주 전 민주당 연구원장을 위촉했다.

/서예진 기자 syj@

與野, ‘통일교 특검법’ 추천권·수사대상 이견

野, 민중기 특검 ‘수사은폐 의혹’ 처리 與 “野 발의 특검, 처리 의지 안 보여”

여야가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법 추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검 출범에 합의하고 각각 특검법안을 제출했지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이 빠졌다고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

라며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는 왜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 내용을 보면 처리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민중기 특검이 ‘정권 봐주기’ 수사를 할 것 아니냐는 (내용에) 한정해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그건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교는 헌법상 규정된 정교 분리 원칙을 훼손했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라며 “특검을 누가 맡고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오늘도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30일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 방법으로 1월 임시회의를 통해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